

2024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법무부 소관)

2025. 3.

대한민국정부

- 목 차 -

(법무부 본부 : 53건)

1. 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는 한편, 인사검증 기능을 인사혁신처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
2. 마약범죄 급증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하여 마약(수사)청의 신설 및 위장 수사의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 1
3. 해외 입법례 및 UN 반부패 협약의 권고 등을 참고하여 독립몰수제의 도입을 검토할 것 1
4. 사적 제재에 관한 국민여론에 유의하여 사법시스템 및 공권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할 것 2
5.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실무 관행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2
6.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높은 결원율을 고려하여 인력 누수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132콜센터’의 전담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 2
7.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3
8. ‘리걸테크’ 산업의 빠른 성장에 맞춰 우리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선도적으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 3
9. 사망한 범죄자의 은닉·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
10.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상한 규정의 폐지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4
11.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조사·발표한 통계를 참고하여 검찰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에 대한 통계를 관리할 것 4
12.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실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
13. 법무부 소관 예규에 ‘정신병자’와 같은 장애인 비하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것 5
14. 딥페이크(deep fake) 성범죄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통합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처벌기준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적극적인 수사·기소를 통해 피해자 보호에 힘쓸 것	5
15. 사법부와 협력 등을 통하여 국가 차원의 사법통역제도 추진체계를 갖출 것	6
16. 재심사건 관련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개선하는 한편, 간첩 사건 재심 결과 무죄 판결 시 상금·보로금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개선할 것	6
17. 법무부 청사의 세종시 이전 방안을 검토할 것	7
18. 전자정보 선별 작업이 끝났음에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않고 검찰의 판단에 따라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
19. 기업들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을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을 검토할 것	7
20.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현재까지 입법공백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것	7
21. 살인 피해자의 아버지가 이혼 후에 양육비조차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유족 구조금의 절반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8
22. 공공장소에서의 흥기난동 등과 관련하여 공중협박죄 및 공공장소 흥기 소지죄 등의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흥기 난동 피해자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8
23. 범죄피해구조금 수령 시 기존의 기초생활수급 등 지원이 중단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8
24.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한 프랑스전력공사의 EU 제소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과 관련하여 국제 배상 판정에 대한 대응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것	9
25. 법무부·교정시설·출입국시설 등 내에 설치된 중국산 CCTV 현황을 전면 조사하여 그 결과와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할 것	10
26. 온라인 도박 범죄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수사과 범죄방지를 위해 특별법	

제정, 도박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 도입, 도박광고 처벌 관련 법령 정비 등 법령·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0
27.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관련 기관 협력 등을 통하여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할 것	11
28. 재정신청권을 고소인뿐만 아니라 고발인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1
29.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검사를 징계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1
30. 검찰·경찰·공수처 간에 수사 관할에 관하여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의 구성을 검토할 것	12
31. 검찰은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바, 국회로부터 직접 자료제출을 요청받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위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에 검찰을 연결할 것	12
32. 강력범죄자에 대한 엄벌주의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형 집행시설 점검 정례화 및 주기적인 현장 시찰 등을 검토할 것	12
33. 최근 재소자가 교도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2
34. 수용자 인권보호 및 국민안전 보장 목적의 특수행정서비스(계호·교화업무) 성격에 비하여 교정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므로 교정행정에 필요한 최대한의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13
35. 구치소·교도소에서 남은 형기를 오인하여 재소자를 잘못 석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발 방지 조치를 검토할 것	13
36. 수형자들의 교화와 재사회화를 위한 ‘교정시설 도서관’ 관련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13
37. 교정시설 내 영유아 양육환경을 전면 재점검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팀을 운영하는 한편, 미성년 자녀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범죄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14
38. 변호인이 교정시설까지 가지 않고도 모바일이나 개인PC를 이용한 스마트 접견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4
39. 교정시설 및 소년범 수용시설에 대한 가석방 활성화 외에도 시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	14
40. 전자장치 착용자 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관리 인력의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것	15
41. 보호관찰관을 보좌하는 무도실무관 등 계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근로자들에게 특수직무수당·계호업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처우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15
42. 사회로 나온 마약사범들이 치료·재활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므로, 마약 중독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 확보, 장단기 치료기관 확보 등 정책을 마련할 것	15
43. 이민청 설립과 관련, 해외 정책 사례 등을 참고하여 이민정책의 방향성 및 전략을 먼저 정립하고 이와 연계하여 조직의 역할과 목표를 설정하는 등, 신중하고 심도있게 접근할 것	16
44.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와 관련하여 최저임금 보장 등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16
45. 외국인 유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지역 사회에 다시 정주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포함한 정책을 폭넓게 수립할 것	16
46.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파악하여 현장에 맞는 탄력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고, 불법체류 증가로 인한 고용문제 등 국내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할 것	16
47. 난민정책 수립과 난민범죄대응을 위하여 통계자료 및 사례집 관리 방안 등을 검토할 것	17
48. 수사상 출국금지를 할 경우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사후적인 감독을 철저히 할 것	17
49. 난민소송과 관련한 생계비 부정수급 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통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금융위와 출입국정보시스템(ICRM) 연계를 통해 난민신청자의 환전거래 내역을 모니터링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17
50.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인력 부족 문제로 계절노동자와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원 증원 등을 통해 신속한 비자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18
51.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강화 등을 통해 권익침해 소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외국인 출국지원센터 등 대안적 보호시설을 확충할 것	18
52. 외국음식 전문음식점의 E-7 비자 외국인 주방장 및 조리사 중 중식당에만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타 음식점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	18
53. 지방 전문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모집을 통해 지방의 산업 노동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대학 사업에 지방상황을 반영할 것	18

(대검찰청 : 18건)

1.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보장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9
2. 탄핵소추 발의 검사에게 1,000만원씩 지급하는 동우회 규정 전체 개정을 재고할 것	19
3. 검찰의 보완수사 규정 등 현행 검찰·경찰·공수처의 모호한 수사권의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19
4. 마약류 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	19
5. 특수활동비가 마약 위장수사 등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20
6. 검찰이 확보하여 디넷(D-NET)에 보관 중인 자료의 지속적인 보관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에 포함된 개인정보 등의 처리 방안을 강구할 것	20
7. 청소년의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1
8. 검찰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용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	21
9.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마약수사청’ 설립 방안을 검토할 것	21
10. 보복 범죄 사건이 엄중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	22
11. 검찰이 국회로부터 직접 자료제출을 요청받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에 검찰을 연결할 것	22
12.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 민주적 통제 및 구속력 확보 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2

13. 범죄피해자구조금 홍보를 활성화하고, 구상권 행사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23
14. ‘사건평정위원회’에 징계 권고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3
15. 형사보상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23
16.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과정에서 당일 거래량 30% 초과 부분에 대해 증권사 또는 금융 당국에 송부한 수사 협조 공문을 제출할 것	23
17. 병원에서의 대리수술·시술 등 불법의료행위 및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료인·구급대원을 폭행하는 행위를 엄단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	24
18. 사이버렉카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익형 가짜뉴스 유포 사범 엄단을 위해, 원칙적 구속수사 및 범죄수익환수 등 실질적 처벌방안 마련할 것	24

(서울고등검찰청·수원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동부지방검찰청·서울남부지방검찰청·서울북부지방검찰청·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정부지방검찰청·인천지방검찰청·춘천지방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 : 7건)

1. (공통) 정치적 사건에 대한 수사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로 이루어지거나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25
2. (공통) 모든 피의자에 대하여 인권 친화적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27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변론이 종결된 이후 공탁이 이루어지면 그 경위나 피해자의 의사 등이 재판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9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활동비가 수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9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9
6.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가 소년범의 건전한 성장 및 효과적인 품행 교정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할 것	30
7. (수원지방검찰청) 마약 수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강력범죄수사부 신설 등 마약범죄 대처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30

(대전고등검찰청 · 대구고등검찰청 · 부산고등검찰청 · 광주고등검찰청 · 대전지방
검찰청 · 청주지방검찰청 · 대구지방검찰청 · 부산지방검찰청 · 창원지방검찰청 ·
울산지방검찰청 · 광주지방검찰청 · 전주지방검찰청 · 제주지방검찰청 : 10건)

1. (공통) 아동학대 사건의 지속적인 관심과 엄정한 처벌을 위해 노력할 것 30
2. (공통) 경찰 퇴직 공직자가 로펌 취업 심사를 신청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경찰의 전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것 33
3. (공통)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사건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장비, 인력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포렌식 과정에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36
4. (대전고등검찰청) 범죄피해보호자기금 지급 후 구상 청구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39
5.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청 관사 중 국민평형 이상의 대형
평수 관사에 대해 규모의 적정성 및 반납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 39
6.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검사들이 대응
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제작할 것 40
7. (광주고등검찰청)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외국 노동자 활용을 위해 계절
노동자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자 문제를 지역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 41
8. (대전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미제사건 증가, 지능 범죄, 마약 범죄의
폭증과 처리 지연 이유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1
9. (울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의 영장청구 기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와 그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42
10. (창원지방검찰청)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서울로 이송하거나
특별수사팀 지원요청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신속하게 수사할 것 42

1. 2024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법무부)

구분	시정 · 처리요구사항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 부	1. 인 사 정 보 관 리 단 의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는 한편, 인사 검증 기능을 인사 혁신처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인사정보관리단의 2025년 운영예산 (정부안 4.2억)은 국회에서 전액 삭감 의결되었음 - 공과금 납부 등 최소한의 운영조차 어려운 상황임 ○ 복잡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검토가 중요한 검증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타 부처로의 이관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법무부 본 부	2. 마약범죄 급증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하여 마약 (수사)청의 신설 및 위장수사의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	○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수사권한, 수사정보, 수사역량이 결집된 마약 수사청의 설립을 검토·연구중에 있음 - 업무범위, 수사관할, 설치지역, 현 사법시스템 하에서의 도입 방식, 인력, 예산 등 방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집중 검토 중임 - 또한,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만큼 입법 과정에서 검토 결과를 적극 개진할 예정임 ○ 마약류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증거 수집 및 범죄 사전차단,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위장수사 제도 도입을 추진 중임 - 국회, '24년 위장수사 관련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3건 발의하여 현재 심의중이므로 향후 검찰에서도 수사 현장 의견 적극개진 예정
법무부 본 부	3. 해 외 입법례 및 UN 반부패 협약의 권고 등을 참고하여 독립몰수제의 도입을 검토할 것	○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여 범죄의 근원적 동기를 차단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독립몰수제도의 도입 필요성 있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현재 독립몰수에 대한 여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으로, 법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에 부합하는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22대 국회에서 윤종오 의원의 형법 개정안 등 독립몰수 관련 법안 6건 계류 중
법무부 본 부	4. 사적 제재에 관한 국민 여론에 유의하여 사법 시스템 및 공권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할 것	○ 검찰은 국민의 안전, 재산에 대한 실효적 보호를 위해, 전세사기 및 사이버렉카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향후 법 집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처벌의 공백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작업도 병행하겠음
법무부 본 부	5.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실무 관행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법무연수원에 ‘검찰 결정문 개선 연구 TF’를 설치하여 공소장일본주의 쟁점 사례 검토, 학계 의견 청취 등 공소장 간소화 방안을 비롯한 검찰 결정문 개선 방안에 대하여 연구 중임
법무부 본 부	6.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높은 결원율을 고려하여 인력 누수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132 콜센터’의 전담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	○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의하여 결원 감소 및 인력 보강을 위해 노력하겠음 ○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인공지능 법률구조 서비스’ 및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위 사업이 구축되면 기존 상담인력 대체 및 법률구조 수요를 분산함으로써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32 유선상담은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므로, 법률상담의 내실화 제고가 예상됨. 시스템 구축 후 효과를 반영하여 검토하겠음
법무부 본 부	7.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예산 증액 및 법령 개정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 및 처우 수준 개선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를 피고인 국선전담변호사 수준으로 개선하고 국선변호사 수당 지급 기준 변경하여 보수 현실화 ※ '25. 2~3. 보수 증액 관련 규칙, 지침 개정·시행 예정 ○ 향후 예산 증액을 통한 진술조력인 처우개선 추진 - '26년도 예산 증액시 상근 진술조력인 급여 현실화 및 근속수당 도입 등 적극적인 진술조력인 처우개선 추진 예정
법무부 본 부	8. '리걸테크' 산업의 빠른 성장에 맞춰 우리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선도적으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	○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법무부의 선도적 역할에 대해 적극 공감 ○ 다만 리걸테크 서비스에는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장점과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 등을 해할 수 있는 단점이 함께 존재하므로, - 양자를 조화시킨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리걸테크 산업의 바람직한 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법무부 본 부	9. 사망한 범죄자의 은닉·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독립몰수제도 도입을 비롯하여 범죄 수익 환수 관련 국회의 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관련 법제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음 ※ 22대 국회에서 윤종오 의원의 형법 개정안 등 독립몰수 관련 법안 6건 계류 중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검찰의 범죄수익환수 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외로 유출된 재산을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 2024년 검찰의 범죄수익환수액은 1,526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65% 증가
법무부 본 부	10.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상한 규정의 폐지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상가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공감함 ○ 법무부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환산보증금 상한 규정의 폐지 여부를 비롯한 상가 임차인 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음 ※ '24. 12 관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전현희 의원)
법무부 본 부	11. 한국형 사법 무정 책 연구원이 조사·발표한 통계를 참고하여 검찰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에 대한 통계를 관리할 것	○ 자살은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여 발생하므로 수사로 인한 자살인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다만, 수사 중 사건관계인이 사망한 경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더욱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음
법무부 본 부	12.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실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할 경우 수사의뢰 하는 등 법령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있음 - 2024년 가정폭력 이수명령 실시 사건수는 437건이며, 이수명령 불응에 따른 수사의뢰 건수는 18 건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앞으로도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실효성 강화를 위해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이수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법무부 본 부	13. 법무부 소관 예규에 ‘정신병자와 같은 장애인 비하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것	○ 「분류처우 업무지침」 개정('25.2.27.) - 「분류처우 업무지침」(법무부예규) [별표기] ‘처우등급별 판정 및 처우 기준’ 내용 중 ‘정신병자’ 등 표현 ‘정신질환자’ 등으로 수정 완료
법무부 본 부	14. 딥페이크(deep fake) 성범죄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처벌기준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적극적인 수사·기소를 통해 피해자 보호에 힘쓸 것	○ 전담검사 증원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증설을 위한 직제 요구('24. 10. 및 '25. 2.) - '22. 12. 전국 18개 검찰청(총 23명) 최초 지정한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25. 2. 전국 35개 검찰청 (총 58명)으로 확대하는 등 전담인력 확보 - 전국 시·도경과 대응검찰청간 ‘수사 실무협의회’ 개최('24. 10.), 디지털성범죄 통합 협력체계 강화하여 엄정 대응 지속 중 ○ 적극적인 수사 및 기소를 위해 노력하고, 처벌기준 강화 및 피해자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사건 엄정대응 지시('24. 6.) -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엄정대응 지시 및 전국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 실시('24. 8.) -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허위 영상물 사건처리기준 정비('24. 10.) - 대검·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실무협의회 개최('24. 12.) - 「디지털성범죄 대응 TF」 운영으로 디지털성범죄 수사매뉴얼 발간 및 사건처리기준 정비 계획('25. 3.)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도입된 위장수사 및 신분비공개 수사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가능하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25. 6. 시행예정)
법무부 본 부	15. 사법부와의 협력 등을 통하여 국가 차원의 사법통역제도 추진 체계를 갖추 것	○ 검찰은 '22. 5. 「통역인 운영규정」(대검찰청 예규)을 마련하여 시행 중임 ○ 국가 차원의 사법통역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어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고,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에 성실히 참여하겠음
법무부 본 부	16. 재심사건 관련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이행 되도록 개선하는 한편, 간첩사건 재심 결과 무죄 판결 시 상금·보조금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개선할 것	○ 과거사 재심사건 대응 매뉴얼은 내부적으로 공판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로, 개개 사건별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구형 및 상소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앞으로도 과거사 사건에서 억울하게 처벌받은 피해자들의 신속한 명예 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겠음 ○ 규정이 시행된 2020. 1. 7. 기준 5년 이전에 상금 등이 지급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었고, 현재까지 환수가 가능하였던 사건은 없었음 ○ 향후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등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환수조치를 할 예정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 부	17. 법무부 청사의 세종시 이전 방안을 검토할 것	○ 법무부의 수도권 잔류는 당초 국회 특위에서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한 결과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향후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결정할 문제이므로 국회에서의 법 개정 진행 과정에 따라 검토하겠음
법무부 본 부	18. 전자정보 선별 작업이 끝났음에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않고 검찰의 판단에 따라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검찰은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는 즉시 삭제하고 있음 ○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대검예규)」 개정을 통해 ‘법정 재현이나 동일성·무결성 검증을 위해 전체 이미지를 보관하는 예외적인 경우 피압수자에게도 그 취지를 설명하고, 전자정보 상세목록에 기재하여 교부하며 접근이 통제된 상태로 엄격히 관리함을 명문화’ 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있음
법무부 본 부	19. 기업들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을 위한 채무자 회생법 개정을 검토할 것	○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 도입, 물적 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정부안, '24. 6. 27. ○ 영업용 필수재산의 파산재단 면제,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 절차를 개선 등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국회 제출 ※ 박준태 의원안, '24. 9. 30. - 국회 논의 적극 지원 예정
법무부 본 부	20.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현재까지 입법공백이	○ 헌법재판소 결정('19. 4.) 이후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20. 11.),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계속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것	○ 「모자보건법」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논의를 진행 중임
법무부 본 부	21. 살인 피해자의 아버지가 이혼 후에 양육비조차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유족구조금의 절반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현제도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또는 유족과 가해자와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범죄피해자와 유족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구조금 제도를 개선하겠음
법무부 본 부	22. 공공장소에서의 흥기난동 등과 관련하여 공중협박죄 및 공공장소 흥기 소지죄 등의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흥기난동 피해자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됨('25. 2. 27.) ○ 현재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공공장소 흥기 소지죄도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계속 지원할 예정 ○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흥기난동 피해자에 대해서 구조금·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특히,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24. 7.) 이후 서민금융진흥원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전담직원을 통해 금융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에게 맞춤형 서민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하고 있음
법무부 본 부	23. 범죄피해구조금 수령시 기존의 기초생활수급 등 지원이 중단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회의에 참석하여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선정 시 소득 및 재산에서 구조금 공제하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음('24. 11. 5.) ○ 관련 부처에 의견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 부	24.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한 프랑스전력 공사의 EU 제소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과 관련하여 국제 배상 판정에 대한 대응방식을 전면 재 검토할 것	○ 법무부는 2023. 8.부터 국제법무국을 신설한 이래, 주요 국책사업과 관련된 국제소송 등에서 법률지원을 요청한 정부 부처 및 공기업에게 다양한 자문과 소송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동 사안을 포함하여, 향후 관련 국제 소송 등이 발생할 경우 정부 부처와 공기업들의 법률 현안과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국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에서 국익과 국고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정부는 증가하는 ISDS 사건에 효과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 4. 대통령훈령인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계부처로 구성된 ‘국제투자분쟁 대응단’을 통해 ISDS 사건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등, ISDS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왔음 ○ 정부는 위와 같이 관계부처로 구성된 국제투자분쟁대응단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교수 등) 및 국내외 정부 대리로펌과 심도 있게 논의하며, 원 판정의 중대한 오류를 시정하고 향후 부당한 ISDS 제기를 방지하고자 필요시 불복 절차를 개시하였음 ○ 정부는 향후에도 관계부처, 외부 전문가 및 국내외 정부대리로펌과 긴밀히 협력하며,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ISDS에 대응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 부	25. 법무부·교정시설·출입국시설 등 내에 설치된 중국산 CCTV 현황을 전면조사 하여 그 결과와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할 것	○ (교정) 전면 조사 결과 중국산 CCTV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24년 10월) - 추가 설치 시 국산 보안 인증품으로 설치 계획임(TTA 인증품) ※ 중국산 CCTV 351대(17개 기관)를 국산 보안 인증품으로 교체 완료('23년3월~12월) ○ (출입) 전국 출입국·외국인기관 대상 CCTV 보유현황을 전수조사 실시('24년10월) - 전체 2,239대 중 중국산 없음 ○ (보호) 중국산 CCTV 장비 교체 추진 - CCTV 장비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중국산 CCTV 장비 37대를 파악, 8대는 교체 완료하였으며 29대는 2025년 내 순차적으로 교체 예정임
법무부 본 부	26. 온라인 도박 범죄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수사와 범죄방지를 위해 특별법 제정, 도박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 도입, 도박 광고 처벌 관련 법령 정비 등 법령·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 및 청소년 보호 위해 '범정부 대응팀'에 참여하여 법령 제정, 제도개선 등 건의, 수사·단속, 치유·재활 등 전방위적 대응방안 지속 추진 중임 - 법정형 강화, 수사단서 확보제도 도입, 범죄수단 차단 제도(도박 사이트 차단, 도박계좌 지급정지) 개선, 불법 도박 광고행위 처벌, 중독 청소년 치유·재활 예산 확보 등 종합적인 특례법 제정 논의 ○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여 범죄 유인 제거하는 독립몰수제, 대포통장 유통자에게 금융거래 제한하는 규제 방안 등을 검토하여 추진 예정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 부	27.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관련 기관 협력 등을 통하여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	○ 재산비례벌금제 관련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였으며('25.2.25.), 사회·경제적 약자의 보호와 재범 억제를 위한 '맞춤형 벌금' 제도 정비를 지속할 예정
법무부 본 부	28. 재정신청권을 고소인 뿐만 아니라 고발인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피해자가 아닌 모든 고발인에게 재정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은 남고발의 폐해 우려, 권력분립의 원칙 위배 측면 및 고발인 이의신청권 복원 등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 ○ 현재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입법 논의를 계속 지원할 예정
법무부 본 부	29.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검사를 징계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검사는 수사, 재판, 형 집행 등을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 이를 위해 「검사징계법」에서 검찰총장이 징계청구권자로서 조사 및 징계청구를 하고, 검찰 사무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이 검사징계 위원회를 거쳐 징계하도록 하는 별도의 절차를 정하였음 ○ 별도의 징계절차를 정한 것일 뿐, 징계양정과 기준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등 규정을 적용함 ○ 앞으로도 검사들의 비위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 부	30. 검찰·경찰·공수처 간에 수사 관할에 관하여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의 구성을 검토할 것	○ '21. 1.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수사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수사기관 상호간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경찰과 총 12차례, 해양경찰과 총 2차례, 공수처와 총 5차례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바 있음 ○ 향후에도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 등이 저해되지 않도록 사안에 따라 검찰·경찰·공수처 간에 긴밀히 협의를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법무부 본 부	31. 검찰은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바, 국회로부터 직접 자료 제출을 요청받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위 '의정자료전자유통 시스템'에 검찰을 연결할 것	○ 수사·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의 준사법기관성을 고려하여 검찰의 인사·조직·예산 등 검찰사무를 관장 하는 법무부를 경유하여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시정요구의 취지를 고려하여 국회 요구자료가 보다 신속하고 충실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법무부 본 부	32. 강력범죄자에 대한 엄벌주의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형 집행 시설 점검 정례화 및 주기적인 현장 시찰 등을 검토할 것	○ 현재 분기 1회 이상 기관별 사형 집행시설 점검 실시 - 집행 가능 상태로 보수 및 유지 관리 중 - 향후 주기적인 현장점검 검토 ※ 기관장 등 현장점검 및 지방 교정청 사형집행시설 설치 기관에 대한 순회점검 시 사형집행시설 필수 점검
법무부 본 부	33. 최근 재소자가 교도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급증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거실 내 계호 대상 수용자 범위 확대 - 교도관 폭행 우려가 큰 수용자의 거실 내 특이동정을 전자영상장비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사전에 관찰하여 사고 기능성에 대비 ○ 교정사고 우려가 큰 수용동의 근무지는 수용자의 폭력 행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장비 등 상시휴대(근무벨트 등)
법무부 본 부	34. 수용자 인권보호 및 국민안전 보장 목적의 특수행정서비스(계호·교화업무) 성격에 비하여 교정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므로 교정행정에 필요한 최대한의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정기 직제 협의로 교정공무원 직급 격상 및 증원 추진 - (직급격상) 지휘체계 확립을 통한 조직 역량 및 현장 대응력 강화 • 고난도 대형 기관의 상위직급 확보로 업무범위와 책임에 부합한 지휘구조 마련 • 하위직 직급격상으로 실무직급 확보 및 업무의욕 고취 - (증원) 과밀수용 해소 등 시설 신·증축 시 및 마약 등 고난도 업무 수요 반영을 위한 운영인력 증원 • 수준 높은 교정서비스 및 인권 처우 강화를 위한 현장인력 충원
법무부 본 부	35. 구치소·교도소에서 남은 형기를 오인하여 재소자를 잘못 석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발 방지 조치를 검토할 것	○ 오인석방 재발방지 종합대책(안) 시행 - 소송서류 전자화 추진 • 종이서류 전자화를 통해 소송서류의 누락 및 입력 오기 방지 - 수용기록업무 전문성 향상 • ‘특수교과’ 제도 신설로 업무 전문성 및 책임 강화
법무부 본 부	36. 수형자들의 교화와 재사회화를 위한 ‘교정시설 도서관’ 관련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향후 관련 예산 증액 및 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여 교정시설 도서관이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 부	37. 교정시설 내 영유아 양육환경을 전면 재점검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팀을 운영하는 한편, 미성년 자녀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범죄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양육유아 전담교정시설 운영 - 천안개방(교) 양육유아 전담 수용동 운영 • 육아거실, 놀이방 등 육아시설·물품 구비 - 양육유아 전담팀 운영 및 전문강사 지원 • 유아교육 관련 전공 전담 직원 배치 • 외래강사를 통한 양육유아 관련 어머니 교육 프로그램 등 시행 ○ 미결수용자 등 양육유아 환경 조성 - 일반 수용동과 분리된 별도 육아 거실 등 운영 및 육아용품 등 제공 ○ 수용자 입소 시 및 수용 중 상시적으로 자녀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으며, 현황조사 참여 독려, 상담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수용자 자녀 발굴에 지속적으로 힘쓰겠음
법무부 본 부	38. 변호인이 교정시설까지 가지 않고도 모바일이나 개인PC를 이용한 스마트 접견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변호인 스마트 접견 구축 계획 - (배경 및 목적) • 변호인 화상접견 시 직접 교정시설 방문하여야 함에 따른 업무상 불편 - (향후추진계획) • '25. 3.~5.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스템 구축 • '25. 6. 서울(구) 등 대형기관 시범운영 • '25. 8. 전국 시행 ※ 추후 관계 지침 개정
법무부 본 부	39. 교정시설에 대한 가석방 활성화 외에도 시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	○ 과밀수용 원인과 대책(안) 시행 - 기관 신설 등을 통한 수용정원 확대 • 신축(6), 이전(7), 증축(24) 계획 ※ 수용정원 50,230 → 59,265 확대('28년) ○ 수용환경 개선을 통한 공간 효율성 확보 - 거실 사물함을 벽걸이형으로 설치 • 수용정원 624명 증원 효과 발생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 부	40. 전자장치 착용자 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관리 인력의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것	○ 전자감독 대상자 지도·감독 전담인력 1인당 관리인원을 12명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한 157명 증원을 포함한 2026년도 정기직제 요구안을 2025. 4. 행안부 제출 예정 ※ 2024년 기준 1인당 19.5명 관리
법무부 본 부	41. 보호관찰관을 보좌하는 무도실무관 등 계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근로자들에게 특수 직무수당 계호업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처우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법무부 내 다양한 공무원 근로자에 공통적인 사항으로 무도실무관 등 관련된 공무원 근로자 업무분석을 통해 필요성 검토 ○ 공무원 수당 신설 등의 예산수반 사항은 재정당국과 협의와 승인이 필요하므로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음
법무부 본 부	42. 사회로 나온 마약사범들이 치료·재활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므로, 마약중독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 확보, 장단기 치료기관 확보 등 정책을 마련할 것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중독재활센터를 관장하는 식약처와 함께 부처간 연계를 강화하여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운영('24. 4.) , '25. 1. 기준 누적 185명 실시(현재원 120명) ○ 또한, 법무부 보호관찰소에서는 지역 사회의 중독치료 전문가를 확보하여 인력풀을 구성*한 후,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와 연계하여 치료 또는 상담을 받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재활을 강화하고 있음 * 의사 교수, 중독 관련 상담센터장 등 158명 ** 기존 17개 보호관찰소 운영, 2025년 25개 기관으로 확대 계획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 부	43. 이민청 설립과 관련, 해외 정책 사례 등을 참고하여 이민정책의 방향성 및 전략을 먼저 정립하고 이와 연계하여 조직의 역할과 목표를 설정하는 등, 신중하고 심도있게 접근할 것	○ 우리 부는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대비, 선제적 우수 인재 유치, 외국인 유입 선별 및 통합 촉진 등 새로운 이민정책의 방향성이 담긴 ‘신(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음(‘24. 9.) ○ 정부조직 개편 동향을 고려,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이민정책 전담조직 신설방안을 검토해나가겠음 - 우리 부는 과거 전담조직 추진 선례, 선진국 사례 분석,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을 발표(’23.12), 관련 의원입법안 발의(’24.2.)를 지원한 바 있음
법무부 본 부	44.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 관리사와 관련하여 최저임금 보장 등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서울시-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무부 소관 업무가 아님 ○ 법무부는 유학생 등 국내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사·육아 활동을 확대 허용하는 제도를 검토하여 시행을 준비하겠음
법무부 본 부	45. 외국인 유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지역 사회에 다시 정주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포함한 정책을 폭넓게 수립할 것	○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하거나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겠음
법무부 본 부	46.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파악하여 현장에 맞는 탄력적인 정책이 될 수	○ 구인난을 겪고있는 지역, 산업분야에 우수한 외국인력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노력하겠음 ○ 불법체류 유형에 대한 다양한 빅데이터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있도록 하는 한편, 불법 체류 외국인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고, 불법체류 증가로 인한 고용문제 등 국내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할 것	(여행경로, 사증발급신청 정보 등) 분석을 활용한 불법체류 감축 - 정부합동단속 정례화 등 상시단속 체계 가동,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 유도 및 신규발생 사전차단 등 일관된 불법체류 감소정책 추진
법무부 본 부	47. 난민정책 수립과 난민 범죄대응을 위하여 통계 자료 및 사례집 관리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25. 2월 연도별 난민신청 현황 등 총 18개 항목의 난민 관련 통계를 공개하였음 ○ 난민정책 수립과 난민 관련 범죄 대응을 위해 난민브로커, 허위신청자 통계 관리 및 사례 분석으로 공정한 난민심사업무를 수행하겠음
법무부 본 부	48. 수사상 출국금지를 할 경우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사후적인 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5 및 판례로 확립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출국금지 심사·결정을 하고 있음 ○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 목적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를 강화하겠음
법무부 본 부	49. 난민소송과 관련한 생계비 부정수급 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통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금융위와 출입국정보 시스템(ICRM) 연계를 통해 난민신청자의 환전 거래 내역을 모니터링 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매월 생계비 신규 신청자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해 소득, 가족사항, 주거 형태, 임신유무, 체류기간, 출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난민신청자의 환전거래내역은 개인 신용정보로서, 난민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여부, 금융위와의 시스템 연동에 대한 법률적 근거, 보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 부	50.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인력 부족 문제로 계절 노동자와 유학생들의 비자발급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원 증원 등을 통해 신속한 비자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조직확대 및 인력증원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하여 지속 추진하겠음
법무부 본 부	51.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강화 등을 통해 권익침해 소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외국인 출국지원센터 등 대안적 보호시설을 확충할 것	○ 효율적인 강제퇴거 집행, 인권친화적인 대안형 보호시설을 경상북도 “상주” 등에 신축을 추진 중임
법무부 본 부	52. 외국음식 전문음식점의 E-7 비자 외국인 주방장 및 조리사 중 중식당에만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타 음식점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	○ 중식(중식당) 조리사는 내국인 진출·고용이 활성화된 분야로, 외국인력 도입 확대 및 요건 완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외국인 중식 조리사의 높은 불법 체류율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음
법무부 본 부	53. 지방 전문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모집을 통해 지방의 산업 노동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대학 사업에 지방상황을 반영할 것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선정 및 평가지표 설정 등은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사업으로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겠음

2. 2024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대검찰청 : 고·지검 포함)

구분	시정 · 처리요구사항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검찰청	1.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보장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하여 재수사요청 및 송치요구절차 등을 활용하여 사건이 부당하게 종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복원하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임(의안번호 2200159) - 향후 관련 개정안의 국회 입법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음
대검찰청	2. 탄핵소추 발의 검사에게 1,000만원씩 지급하는 동우회 규정 전체개정을 재고할 것	○ 검사동우회는 상호부조를 위해 재직 중인 검사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검사동우회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기금 사용 관련 규정의 개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대검찰청	3. 검찰의 보완수사 규정 등 현행 검찰·경찰·공수처의 모호한 수사권의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21년 형사사법 관계 법령의 개정 이후 실무상 많은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형사사법체계에 반하거나 입법이 미비하여 불명확한 부분에 관한 개정안 발의 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회의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음
대검찰청	4. 마약류 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마약류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증거수집 및 범죄 사전차단,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신분위장수사 제도를 도입 추진 중임 - 국회, '24년 신분위장수사 관련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3건 발의하여 현재 심의중으로 향후 검찰에서도 수사현장 의견 적극 개진 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현재 경찰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 경찰청과 적극 협의하여 위장수사 제도를 마련하겠음
대검찰청	5. 특수활동비가 마약 위장수사 등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 검찰은 기존에도 특수활동비를 국민 생활침해사범수사, 마약거래 위장수사,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 수사 등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수사·정보활동 등에 집행함으로써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 왔음 ○ 한편, 검찰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특수활동비 집행에 관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구비하는 등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장치도 두고 있음 ○ 향후에도 특수활동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음
대검찰청	6. 검찰이 확보하여 디넷(D-NET)에 보관 중인 자료의 지속적인 보관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에 포함된 개인정보 등의 처리 방안을 강구할 것	○ D-NET에 등록·보관된 디지털 증거는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대검예규)」에 따라 접근이 엄격히 통제·관리되고 있으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보관 필요성이 소멸된 디지털 증거를 지속적으로 폐기하고 있음 - '24. 10. 1.자 위 예규 개정을 통해 디지털 증거의 폐기 범위를 더욱 확대하였음 ○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점검을 통해 국민의 인권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검찰청	7. 청소년의 온라인 불법 도박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전담검사가 영장처리 단계부터 공소 유지까지 직접 관여하는 전담수사체계 구축하였고 청소년 대상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사건처리 및 구형 기준을 강화하였음 ○ 법무부, 교육부, 대검, 경찰, 방통위 등 9개 기관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응팀’에 참여하여 청소년 이용 온라인 불법 도박개장행위 처벌, 중독 청소년 치유·재활 예산 확보 등 특례법 제정 추진 중임 ○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을 개정하고 적극 적용하고 있음 - ‘1일 8시간 교육’에서 ‘1일 4시간 교육 및 6회 상담’으로 개정, 실질적 교육·상담 기회를 제공하여 도박 중독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지원
대검찰청	8. 검찰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용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	○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수사·정보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인 특수활동비의 특성 및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자료 중 일부만을 공개하라는 관련 행정 소송 확정 판결 취지에 따라 구체적인 용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기는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대검찰청	9.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마약수사청’ 설립 방안을 검토할 것	○ 마약단속에 대한 역량 강화의 방안으로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수사 권한, 수사정보, 수사역량이 결집된 마약수사청의 설립을 검토·연구 중에 있음 ○ 다만, 업무범위, 수사관할, 설치지역, 현 사법시스템 하에서의 도입 방식,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인력, 예산 등 방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집중 검토 중에 있으며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만큼 입법 과정에서 검토 결과를 적극 개진할 예정임
대검찰청	10. 보복 범죄 사건이 엄중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	○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침해하고 형사사법 질서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범죄로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함 ○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등을 활용하여 추가 위해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고, 석방 또는 조사 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 적극 구속 수사하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대검찰청	11. 검찰이 국회로부터 직접 자료제출을 요청 받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의정 자료전자유통시스템’에 검찰을 연결할 것	○ 수사·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의 준사법기관성을 고려하여 검찰의 인사·조직·예산 등 검찰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를 경유하여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시정요구의 취지를 고려하여 국회 요구자료가 보다 신속하고 충실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대검찰청	12.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 민주적 통제 및 구속력 확보 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검찰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사건에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법리와 증거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여 왔음 ○ 그 동안의 운영상황 등을 분석하여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검찰청	13. 범죄피해자구조금 홍보를 활성화하고, 구상권 행사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검찰은 '25. 1. 범죄피해자 구조금 등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송출하거나 유관기관에 홍보하고, '25. 2. 범죄피해자지원 사이버 강의를 개설하는 등 일선 청 구조금 업무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하여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음 ○ '25. 3. 21. 구상권 행사를 위한 가해자 재산 조사의 법적 근거가 신설(「범죄피해자 보호법」 법률 제20433호, 시행)된 만큼 「구상권 행사 업무 매뉴얼」 제작 등 보다 적극적인 구상권 집행을 위한 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대검찰청	14. '사건평정위원회'에 징계 권고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무죄 선고된 검사의 과오에 대하여는 과오의 유형 및 경중에 따라 징계 뿐만 아니라 주의·경고, 평정 결과의 인사 반영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앞으로도 엄격한 평정을 통해 사건 처리에 대한 검사의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음
대검찰청	15. 형사보상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형사보상금은 당사자의 신청과 법원의 재판을 거쳐 결정되고 확정 즉시 신속하게 지급하고 있음 ○ 앞으로도 형사보상금 결정시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대검찰청	16.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과정에서 당일 거래량 30% 초과 부분에 대해 증권사	○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 관련 수차례 심리분석 의뢰를 하여 결과를 회신받았고, 심리분석 과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또는 금융 당국에 송부한 수사 협조 공문을 제출할 것	에서 참조된 각종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 등을 상대로 한 영장을 청구하여 각 기관 내부의 심리자료 등을 압수하였음 ○ 다만, 위와 같은 각종 공문 등은 관련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가 제기되어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해당 수사 관련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 등이 있어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대검찰청	17. 병원에서의 대리수술·시술 등 불법의료행위 및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료인·구급대원을 폭행하는 행위를 엄단할 수 있도록 철저히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	○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중대 범행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고, 사무장병원 사건 기소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 부당이득금 환수도 철저히 하고 있음 ○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법정형이 중한 응급의료법 등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여 엄단하도록 지시하였음 ○ 앞으로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의료행위 사범 엄단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대검찰청	18. 사이버렉카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익형가짜뉴스 유포 사범 엄단을 위해, 원칙적 구속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 등 실질적 처벌 방안 마련할 것	○ 대검찰청은 '24. 7. 15. 일선 검찰청 상대로 「사이버렉카 등」 악성 콘텐츠 유포사범 엄정 대응 지시를 하는 등 명예훼손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구속수사 적극 검토 및 범죄수익 철저히 환수 등에 만전을 다하고 있음 - 최근에는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비방영상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포하고, 억대의 수익을 취득한 ‘사이버렉카’ 유튜버의 범죄수익 약 2억 원에 대해 최초로 추징이 선고된바 있음 (’25. 1.) ○ 앞으로도 검찰은 이러한 수익형 가짜뉴스 유포 사범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실질적 처벌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수원지검	1. 정치적 사건에 대한 수사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로 이루어지거나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공통)	○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 노력하겠음 (서울고검) ○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음(수원고검) ○ 서울중앙지검은 모든 사안에 대하여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사결정을 위해 검찰 시민위원회, 부장검사 회의 등을 활용하고 있음 ○ 아울러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 이목이 집중된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 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임 ○ 앞으로도 사건 수사 및 처분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음 (서울중앙) ○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준수하는 등 국민들께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서울동부) ○ 차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여 수사과정 및 결론에 대한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음(서울남부) ○ 서울북부지검은 모든 사건의 수사와 결정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을 준수하여 국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서울북부) ○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서울서부) ○ 향후에도 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의정부지검) ○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음. 향후에도 유념하겠음(인천지검) ○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직접수사 개시 사건 인권보호관 점검 지침」에 따라 인권보호관이 점검·보고하고, 사건 처리 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검찰 시민위원회 등 제도를 활용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음(춘천지검) ○ 모든 수사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성과 상당성을 갖추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처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수원지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수원지검	2. 모든 피의자에 대하여 인권 친화적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공통)	○ 주기적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하는 등 인권 친화적 수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유념하겠음(서울고검) ○ 사무감사, 인권보호관 직무수행 등을 통해 관내 검찰청에서 적법절차가 철저하게 준수되도록 지속적인 점검·지도를 해 나가겠음(수원고검) ○ 헌법을 비롯하여 각종 법령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이 존중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 특히,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점검·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 향후 인권 친화적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음(서울중앙) ○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전 직원 상대로 인권보호 관련 유의사항을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서울동부) ○ 차후에도 인권보호수사규칙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인권 중심의 수사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음(서울남부) ○ 서울북부지검은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인권보호 관련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제도 이행 자체점검 리스트」를 제작 및 배포하여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으로 점검·감독하고, 매주 인권보호제도 10개 핵심사항을 SMS를 통해 홍보하는 등 피의자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서울북부) ○ 인권보호관을 통해 인권침해 예방·감독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의 인권침해 여부 역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 ○ 앞으로도 인권 보호 실태 점검 및 교육을 충실히 하는 등 피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음(서울서부) ○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의정부지검) ○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음. 향후에도 유념하겠음(인천지검) ○ 조사실에 「인권수사보호규칙 안내문」이 부착된 메모가 가능한 의자를 비치·제공하였고, 관내 수용시설 등 인권 보호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피의자 조사시 변호인 통지, 장시간조사·심야조사 제한을 충실히 준수하는 등 앞으로도 인권 친화적 수사를 위해 노력하겠음(춘천지검) ○ 모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비롯한 사건관계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음 (수원지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수원지검	3. 변론이 종결된 이후 공탁이 이루어지면 그 경위나 피해자의 의사 등이 재판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서울중앙)	○ 개정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공탁에 대한 피해자 의견 확인 요청이 오면 담당 검사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5일 내에 법원에 송부하는 등 기습공탁이 부당하게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도록 노력하겠음
	4. 특수활동비가 수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서울중앙)	○ 서울중앙지검은 2024년도까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검찰청의 수사정보수집과 각종 수사활동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예산이라는 특수활동비의 편성 목적과 집행지침에 맞추어 정확하게 집행하고 있음 ○ 2025년도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2025년부터는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이 없으나, - 향후 특수활동비가 추가로 편성될 경우 특수활동비의 편성 목적과 집행지침에 맞도록 더욱더 철저히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음
	5.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서울중앙)	○ 서울중앙지검은 수사담당자가 아닌 전문공보관으로 하여금 공보업무를 전담하게 하여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의 접촉 창구를 일원화하는 한편,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에서 정한 공개 기준과 범위, 방식 및 절차를 준수하여 공보 활동을 하고 있음 ○ 앞으로도 공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피의사실공표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수원지검	6.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가 소년범의 건전한 성장 및 효과적인 품행 교정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할 것 (서울남부)	○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는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높은 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개별 사정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여 재범방지에 도움이 되고 있음 ○ 범죄예방위원들의 전문성 강화, 기소 유예 처분 이후 대상자들에 대한 사후 추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7. 마약 수사를 효과적 으로 하기 위해 강력 범죄수사부 신설 등 마약범죄 대처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수원지검)	○ 효과적인 마약 수사를 위해 2023년 이후 매년 대검에 강력범죄수사부 신설을 요청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 으로 추진할 계획임
대전고검 대구고검 부산고검 광주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창원지검 울산지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1. 아동학대 사건의 지속 적인 관심과 엄정한 처벌을 위해 노력할 것 (공통)	○ 항고 사건을 아동학대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히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고, 기소된 사건은 항소심 공판 에서도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추적조사하여 죄질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엄정 대응하겠음 (대전고검) ○ 아동학대 항고사건 접수시 아동학 대범죄처벌법 매뉴얼에 따라 엄정 처리하는 한편, 항소제기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수사검사와 협력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대구고검) ○ 부산고검은 2021. 5. 대검의 「아동 학대 사건관리회의의 활성화 방안」 및 2024. 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법률 시행을 청내 전파하고, 항고사건 수사 및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엄정한 처벌 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 조치의 필요성을 적극 검토할 예정임(부산고검) ○ 항고사건 처리에 있어 처리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항소심 재판 시 아동학대사건의 중대성, 죄질 등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적극 공소 유지하겠음(광주고검) ○ 전담검사가 경찰 등 유관 기관과 수사과정에서 긴밀하고 신속하게 협력하여 아동학대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활성화해 피해아동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음(대전지검) ○ 형사2부(성폭력·강력 전담 부서)에 아동학대 사건 전담검사 2명을 배치하여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유관기관과의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등을 통해 사건의 적정한 처분을 도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아동학대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청주지검) ○ 대구지검은 아동학대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시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를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도 청취하고 있음 ○ 앞으로도 대구지검은 아동학대사건에 대해 면밀하게 대응하여, 수사·공판 및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하겠음(대구지검) ○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24. 12. 3.)를 통해 초동수사단계에서부터 아동 보호전문기관과 공조하여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적정처분과 피해아동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아동학대 사건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전담검사가 수사지휘부터 공소유지에 이르는 전과정을 총괄하여 엄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법과 원칙에 따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음(부산지검) ○ 여성·강력범죄 전담부(형사제2부) 검사 4명 중 수석 검사를 포함한 검사 3명을 아동범죄 전담검사로 지정하여 아동학대 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창원지검) ○ 대검 「아동학대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 예규('21. 10.)에 따라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엄정 대응하고 있고, 피해아동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의료자문 및 심리분석을 통해 부친이 생후 3개월 아동의 두개골을 골절 시킨 혐의를 밝혀내 기소('24. 5.) 하는 등 과학적 수사기법 활용 중 -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학자금, 주거환경 개선, 심리치료 지원('24. 11.) 등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노력 중(울산지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아동학대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안의 중대성, 죄질 등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엄정 대응하겠음(광주지검) ○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유관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처분에 반영하는 등 아동학대 사건의 적정 처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사건에 엄정 대응할 예정임(전주지검) ○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사경과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임시 조치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신속한 피해자 보호와 아동학대범죄 엄단에 만전을 기하겠음(제주지검)
대전고검 대구고검 부산고검 광주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창원지검 울산지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2. 경찰 퇴직 공직자가 로펌 취업 심사를 신청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경찰의 전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것 (공통)	○ 수사 과정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여 전관 예수가 사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살피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신뢰 회복을 위하여 다각도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대전고검) ○ 전관이 선임된 사건은 결정 전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전관 선임으로 인한 편파 수사 진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실체 관계의 왜곡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경위를 규명하여 책임을 묻는 등 전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대구고검) ○ 경찰 퇴직 공직자가 사건 수사에 불법 관련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관련 인지 또는 재기수사명령 등을 통해 적극 수사하고, 공판 과정에서도 엄중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음(부산고검) ○ 수사권 조정 후 경찰의 전관 문제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송치 사건 처리의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음(광주고검) ○ 송치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찰 퇴직자가 실질적인 변호를 위해 수사기관을 부적절하게 접촉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사건관계인으로부터 관련 구제신청 등이 접수되면 철저히 경위를 확인하는 등 경찰 전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대전지검) ○ 경찰 퇴직자 출신 변호사가 수임하는 사건에 대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개입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수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겠음(청주지검) ○ 대구지검은 『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대검 예규 제1133호, 2020. 11. 9. 시행) 등에 의거, – 수사중인 사건의 변호활동 내역을 검찰청 출입통제시스템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철저히 입력하고 있음 – '25. 2. 대구지검 인권보호관실에서는 대구지검 전직원을 상대로 「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 안내」 전파함 ○ 대구지검은 앞으로도 형사사건 변호활동과 관련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구지검) ○ 사경 송치 및 불송치·수사중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퇴직 경찰들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음(부산지검) ○ 사경 송치 사건 및 불송치·수사중지 기록 검토에 만전을 기하여 경찰의 전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음(창원지검) ○ 대검 「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 지침」 예규('20. 11.)에 따라 KICS(형사 사법정보시스템)에 변호인 활동내역을 입력하는 등 특정 변호인에 대한 특혜 제공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향후 경찰 송치·불송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특정 변호인에 대한 불법적인 특혜 제공이 있었는지를 점검하겠음(울산지검) ○ 경찰 전관을 선임한 사건의 경우 사법절차나 결과에서 부당한 혜택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처리하겠음(광주지검) ○ '경찰 전관'의 개입으로 사건이 부당하게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사법 통제 등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찰 전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음(전주지검) ○ 경찰 퇴직 공직자가 실질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로펌으로부터 그 대가를 분배받는 등 변호사법위반 사안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음(제주지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전고검 대구고검 부산고검 광주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창원지검 울산지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3.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사건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장비, 인력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포렌식 과정에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공통)	○ 증거수집에서 디지털 포렌식의 비중과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현재 가용인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장비 현대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관련 장비,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음 ○ '22년 9월 디지털수사팀에 참관실을 설치하는 등 증거 선별과 관련한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후에도 당사자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음 (대전고검) ○ 대구고지검 통합 디지털 포렌식 센터는 센터장 포함 8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이며, 2024년 전년대비 8.1% 증가한 총 758건의 디지털 수사 지원 요청을 접수·처리하였음 ○ 대구고검 영상조사실 중 일부를 포렌식 참관실로 활용하는 등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원활한 디지털 수사지원을 위하여 장비, 인력 등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음(대구고검) ○ 디지털 포렌식 장비, 인력 관련 예산은 2024년 기준 2023년 대비 53.64%, 2022년 대비 98.83%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예산 확보를 통해 발전된 디지털 포렌식 기술 및 장비로 사건 수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증거능력 확보를 위해 디지털 전자 정보 등 압수시 참관여부 확인서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반드시 징구하여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음. 증거분석 건수 당 당사자의 참관 비율은 2023년도 16.4%(증거분석 632건, 참관 104건)에서 2024년도 23.3%(증거분석 749건, 참관 175건)로 증가 추세임(부산고검) ○ 현재 포렌식 과정에 당사자 참여권은 적극 보장되고 있는바, 참여권 미보장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광주고검) ○ 전자정보 압수시 관련 예규 등에 따라 선별 절차 및 참여 권리에 대해 충실히 안내하고, 변호인이 선임된 당사자는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변호인을 상대로도 참여 의사 유무 등을 명확히 확인토록 하겠음(대전지검) ○ 청주지검에서는 휴대전화 등 정보 저장매체 확보 필요 시 압수 단계에서부터 대전고검에 디지털포렌식 압수지원 요청하여 당사자 참여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시에 장비·인력 지원을 받아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겠음(청주지검) ○ 대구지검은 2021. 8. 23.부터 「대구고·지검 통합 디지털포렌식 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음 - 대구고·지검 여러부서에 분산된 과학수사 지원기능을 수사과 산하로 통합하여 수사과 기능강화 및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과학수사 역량 확충을 위함 ○ 향후에도 대검 소관 부서와 긴밀히 연락하는 등 디지털포렌식 장비, 인력,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 현재 각 검사실에서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에게 「전자정보 압수·수색·검증 안내문」을 교부하는 등 압수수색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전자정보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음 ○ 대구지검은 앞으로도 디지털 포렌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음(대구지검) ○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라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과 신뢰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포렌식 전 과정에 걸쳐 변호인과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참관 기회 부여하고 있음(부산지검) ○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있고, 특히 전자정보 선별 시 당사자의 참여권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음 - 향후에도 포렌식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적법절차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음(창원지검) ○ 대검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예규('24. 10.)에 따라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전 과정에서 피압수자 및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디지털증거를 압수하는 경우 별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안내문을 교부하여 압수·수색·검증 과정을 설명하는 등 당사자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노력 중(울산지검) ○ 전자정보 압수·수색시 당사자에게 압수수색검증 안내문을 배포하고, 참관 여부 확인서를 교부받는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당사자의 참여권을 압수수색검증 전 과정에서 충실히 보장하겠음(광주지검) ○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신속히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는 등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포렌식 과정에서 법령과 지침 등을 준수하여 당사자의 참여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음(전주지검) ○ 디지털포렌식팀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당사자의 참여권을 적극 보장해 나가겠음 (제주지검)
대전고검 대구고검 부산고검 광주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창원지검 울산지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4. 범죄피해보호자기금 지급 후 구상청구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대전고검) 5. 검찰청 관사 중 국민 평형 이상의 대형 평수 관사에 대해 규모의 적정성 및 반납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 (대구고검, 대구지검)	○ 구상금 소송은 대부분 고검의 지휘를 받아 산하청에서 수행하고 있는바, 소 제기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부터 산하청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적극적으로 지휘하는 등 구상청구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현재 대구고검 보유 관사 중 국민 평형 규모 이상의 관사는 2000년 구입한 검사장 관사 1채임 ○ 노후된 대형 소유관사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교환, 임차 전환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적정 규모의 관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향후 법무시설기준에 맞는 관사 운영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음(대구고검) ○ 관사는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국유 재산이므로 관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할 예정이며, 관사 교환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중임(대구지검)
대전고검 대구고검 부산고검 광주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창원지검 울산지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6.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검사들이 대응 하고 피해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제작할 것 (대구고검, 대구지검)	○ 대구고검 산하 지검과 지청은 대검 지시에 따라 시도경찰청과 디지털 성범죄 수사실무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현재 시행 중인 ‘불법영상물 삭제 차단 지원 통합 매뉴얼’ 외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통합 매뉴얼 제작을 대검에 요청할 예정임(대구고검) ○ 현재 대검찰청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으므로, 추후 매뉴얼 하달될 시 대구지검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매뉴얼을 제작하여 적극 시행 하도록 하겠음 ○ 또한 대구지검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성착취물의 삭제·차단을 지원 하고 피해자의 심리치료·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음(대구지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전고검 대구고검 부산고검 광주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창원지검 울산지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7.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외국 노동자 활용을 위해 계절 노동자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자 문제를 지역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 8. 미제사건 증가, 지능범죄, 마약 범죄의 폭증과 처리 지연 이유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대전지검, 제주지검)	○ 지자체·민간 수요를 반영한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음 ○ 수사권조정 등 변화한 수사 환경, 은밀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신종 범죄 다수 출현, 온라인을 통한 조직적이고 간편한 마약거래의 보편화 등으로 장기미제 사건, 지능범죄, 마약범죄 등 사건이 증가하였음 ○ 형사부 인력 보강, 장기미제 현황 및 수사계획 정기점검 등을 통한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지능범죄,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음(대전지검) ○ 코로나19 종식 후 제주 입도 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외국인 범죄도 증가하는 등 검사 1인당 사건 부담량이 증가하면서 미제사건이 다소 증가하였음 ○ 제주지검은 검사실의 형사사건 처리 외 부수적 업무 경감, 수사과 수사지원, 우수 수사관 검사실 우선배치 등 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음 ○ 향후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음(제주지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전고검 대구고검 부산고검 광주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창원지검 울산지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9. 울산지방검찰청의 영장 청구 기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와 그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울산지검)	○ 신속·엄정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있으나, 법원과의 견해 차이로 인해 기각률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음주운전 재범, 서민다중피해범죄 등에 대한 구속영장,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 초기 범인 특징을 위한 압수영장 등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있으나, 울산지법의 영장 기각률이 다른 법원 대비 다소 높은 측면이 있음 - 영장 기각 사유를 상세 분석하여 견해 차이의 원인과 검사 과오 유무를 점검하는 등 영장 기각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10.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서울로 이송하거나 특별수사팀 지원요청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신속하게 수사할 것(창원지검)	○ 창원지검은 '24. 10. ~ 11. 차장검사 1명, 부장검사 1명, 검사 4명을 지원받아 특별수사팀을 편성하고 수사를 진행하여, - '24. 12. 3. A(前국회의원) 등 5명을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하고, - '25. 2. 17. A 등 5명을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정보 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였음 ○ '25. 2. 17.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 등 다수 고발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고자, 해당 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였고, 일부 의혹(A 등의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관여 등)에 대해서는 창원지검에서 계속 수사 중